오늘의 주요기사

2020년 02월 07일 (금)

순서	제 목	매체	카테고리	페이지
1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무급휴직은 안보 포기...계속 근무"	한겨레신문	사회	1
2	특별연장근로 반대 소송 내겠다는 양대 노총의 무책임	국민일보	오피니언	1
3	마스크 생산 연장근로 막는 양대 노총 ... 정부가 빌미 줬다	중앙일보	사설/칼럼	2
4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해 사회적 책임도 함께 져야	서울신문	사설/오피니	2
5	마스크 한 장까지 차별... 특수 간접 노동자에게 안전은 없다	경향신문	종합	3
6	사업장 자발적 휴업 때만 지급 유급휴가 보장 산재처리 인정	경향신문	종합	3
7	신종 코로나 사각지대서 각자도생하는 현장노동자들	경향신문	오피니언	4
8	"10년만에 '근로기준법 주해' 개정판 냈어요"	한겨레신문	사람	4
9	中企 36% "출산휴가제도 업무 공백 우려"	동아일보	사회	5
10	한국지엠 카젬 사장과 법인 파견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경향신문	사회	5
11	"사외 2차 하청도 불법파견"...기업 줄소송 우려	한국경제	사회	6
12	현대차 하청노동자, 현대차 직원 맞다	경향신문	사회	7
13	이 와중에 목포시내버스 기습 파업	한국일보	지방	7
14	르노삼성, 상시 희망퇴직 돌입	한국경제	산업	8
15	주52시간 中企지원 위해 벼락치기 SW발주 금지	매일경제	IT	8
16	사찰노예 고발에...종교 특성상 착취 어렵다는 경찰	경향신문	사회	9
17	"퇴직금 600만원 대신 실업급여 1100만원 받게 해줄게요"	한국경제	경제	10
18	직원 극단적 선택까지 부른 EBS미디어 '황인수의 갑질'	한겨레신문	사회	11
19	" 노조추천 이사제 등 합의... 선 넘지 않아"	한국일보	경제	11
20	기업은행이 불지핀 '노조추천이사제'... 금융권 번지나 촉각	동아일보	경제 금융	12
21	"운용 독립성 없는 스튜어드십코드 국민 연금 '연금사회주의' 부추긴다"	한국경제	증권	13
22	영향력 커진 국민연금, 독립성 확보 우선돼야	매일경제	증권	14
23	중기 경영안전자금 긴급 지원 김기문 회장, 문희상 의장에 요청	매일경제	기업	14
24	성과배분의 중요성	한국일보	오피니언	15
25	마스크 쓰고 부산 찾은 문 대통령 37차례 "부산"	중앙일보	사회	16

26	3040은 빼고... 공공 일자리 2만개 늘었다	서울신문	경제	17
27	공공일자리 81만개 공약 文정부 2년간 6만개 늘어	조선일보	경제종합	17
28	노동을 기억하는 방식들	중앙일보	사설/칼럼	18
29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새로운 조합	한겨레신문	오피니언	19

신문스크랩(2020. 2. 7)

한겨레 hani.co.kr
2020년 2월 7일 금요일 012면 사회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무급휴직은 안보 포기…계속 근무" 최응식 전국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 위원장이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연을 이유로 한 미국 쪽의 무급휴직 통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무급휴직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주한미군의 임무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한미 양국이 대한민국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속히 협상을 타결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무급휴직이 시행되더라도 근무를 계속할 방침이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국민일보
2020년 2월 7일 금요일 027면 오피니언

특별연장근로 반대 소송 내겠다는 양대 노총의 무책임

반등 기미를 보이던 한국 경제가 중국 우한(武漢)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신종 코로나)에 다시 발목을 잡혔다. 제조업체들은 중국에 맡겨온 부품 조달 차질로 생산을 전면 중단해야 하는 위기로 몰리고 있다. 자동차 가전 디스플레이 등 대규모 장치산업들이다. 지난 4일부터 순차적으로 가동 중단에 들어간 현대자동차는 7일부터 국내 공장이 완전정지된다. 완성차 생산라인이 멈춰 서면서 부품업체들도 줄줄이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

정부는 품귀 현상을 빚는 마스크 제조업체 등에 대해 일정 기간 주52시간제 적용을 제외하는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국산 부품이 끊기면서 국산 수요가 폭증하자 자동차 부품기업 31곳도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했다. 그러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31일 재난·재해에 준하는 상황에서만 허용해온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연장근로 사유확대는 탄력근로제 개선 입법이 지연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숨통을 터주기 위한 것이다. 양대 노총은 "국민 생명을 위협해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것까지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마스크 제조업체에 대해 주52시간제 예외를 허용했을 때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사태의 근본적 책임은 현실과 동떨어진 경직적 주52시간제를 밀어붙인 정부에 있다. 기업 노사가 알아서 결정하면 될 근로시간을, 정부가 "어떤 경우에도 주당 52시간을 넘으면 엄벌에 처한다"고 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이후 탄력근로제 확대 등 제도 개선 요청을 철저히 외면한 민주노총의 책임도 결코 작지 않다. 특별연장근로가 절실한 곳은 마스크 생산업체만이 아니다. 사태가 종료돼 중국의 부품 공급이 재개되든 다른 나라에서 조달되든 라인이 재가동되면 차 부품업체들의 연장근로는 불가피하다. 휴업기간 중 밀린 자동차 생산을 가능한 한 이른 시간 내에 복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총이 노조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인 건 맞지만, 국민 생명이 위협받고 경제가 흔들리는 이 시점에 연장근로에 반대해 소송까지 내는 건 지나치다. 노조들은 한국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고 비난해왔다. 그러면 회원 수가 각각 100만명에 육박하는 거대 노총들의 사회적 책임은 어디 갔나.

탄력근로제 개편 철저히 외면하더니
신종 코로나로 인한 기업 고충도 무시
거대 노총의 사회적 책임은 어디 갔나

중앙일보 2020년 2월 7일 금요일 030면 사설/칼럼

마스크 생산 연장근로 막는 양대 노총…정부가 빌미 줬다

온 나라가 신종 코로나 쇼크 상태다.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 물품이 떨어지면서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고, 중국발 부품 공급이 끊기면서 경제는 초비상이다. 이 와중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사유 확대에 반대해 행정소송을 강행할 태세다. 노동부가 주 52시간제 예외 요건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마스크 생산 업체에 적용하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양대 노총은 "인가 요건 확대가 근로시간 연장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을 명분으로 내걸었다.

양대 노총의 이런 행태는 전형적 '노조 이기주의'다. 정부의 연장근로 요건 완화는 위기의 최전선에 내몰린 기업들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워주고자 한 고육지책이다. 양대 노총은 국민 건강과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재난 상황조차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건가.

국민 건강 및 국가 경제 위기 상황 속
기업 숨통 틔워주기 고육책에 어깃장
주 52시간제 보완 미적댄 정부도 책임

노조는 마스크 생산 확대 자체를 막자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또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의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다. 궤변이다. 이 주장대로라면 검역소나 병원 직원 등 외에는 근로 연장 적용이 힘들다. 비상 상황을 맞아 업무가 산더미같이 몰린 제조업체는 그저 팔짱만 끼고 있어야 할 판이다. 백번 양보해 노동계의 악용 우려가 아주 터무니없지 않다고 치자. 긴급 상황이 풀릴 때까지만이라도 참고 기다려 주는 최소한의 배려는 기대할 수 없는가. 국민 건강과 국가 경제의 다급함과 엄중함조차 무시하고 자신의 기득권만 앞세우는 노조의 이기주의와 협량이 참담할 지경이다.

노조가 이렇게까지 나오는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노동계 지지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은 현 정부는 출범 이후 무리한 노동 편향 정책을 폈다. 경직된 주 52시간제, 급격한 최저임금제 인상 등을 밀어붙이며 경제 현장의 주름은 무시했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강경 노선을 앞세운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을 누르고 제1 노총이 됐다. 그 와중에 비교적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던 한국노총마저 강경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선명성 및 조직 확대 경쟁을 벌이고 있다.

주 52시간제는 도입 때부터 부작용이 예견돼 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보완책 마련을 미루다 지난해 가까스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의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마저 노동계 반발과 여야 이견으로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률 제정 대신 임시방편인 시행규칙 개정으로 '땜질'하려다 노동계에 빌미를 줬다.

정부는 이참에 노동계의 막무가내식 행태를 방조해 온 친노조 정책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양대 노총은 지금이라도 대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온 나라가 신종 감염병과 싸우고 있는 이때, 자신들의 권익만 찾는 행태가 과연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지를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없다.

서울신문 2020년 2월 7일 금요일 031면 사설/오피니언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해 사회적 책임도 함께 져야

민주노총 출범에 기여한 노동운동 원로들이 그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에 사회적 대화 참여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을 제치고 최근 제1노총에 올라선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계속 거부하며 사회적 대립과 투쟁 일변도의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쓴소리를 한 것이다. 노동계 원로들은 민주노총이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의 어려움에 더 관심을 갖고 플랫폼 노동자 출현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정부나 기업과 협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995년 출범한 민주노총은 지난해 말 조합원 96만 8000명으로 한국노총 93만 3000명을 앞서며 처음으로 제1노총의 지위를 얻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제1노총의 위상에 걸맞은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의구심이 남는다. 한국기업 노동자들의 노조 조직률은 11.8%에 불과하다. 88% 노동자들이 노조 밖에, 민주노총의 밖에서 사회적 연대를 고대한다는 뜻이다.

2015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노조 조직률은 29.1%로 한국의 약 3배 수준이다. 단순히 노조 조직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노동자 등에 대한 활동 강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기업 중심과 정규직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사회적 고통을 나눠 질 때 민주노총의 정당성과 명분 또한 높아질 수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의 직접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특혜를 원하는 게 아니라면,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참여한 경사노위에서 대화하는 자세가 기본이다. 따라서 오는 17일 열리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더불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해 정부가 마스크 제조업체의 연장근로를 요청하자 이를 반대하며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힌 태도는 준국가재난상태라는 현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는 노동자들의 권익도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경향신문 2020년 2월 7일 금요일 004면 종합

마스크 한 장까지 차별… 특수·간접 노동자에게 안전은 없다

우체국, 택배노동자에 방역품 지급 지연… 집배원엔 다 지급
마스크 1장 받은 노동자들 "빨아 쓰나" 손 세정제 등 사비로
백화점·면세점도 협력업체 직원들엔 마스크조차 지급 안 해

2018년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우체국 택배노동자로 일하는 박대희씨(40)는 6일에야 우체국 물류지원단으로부터 보건용 마스크 한 장을 받았다. 박씨는 매일 사비로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구매한다. 박씨는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 물류지원단이 지난주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현장에 배포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받지 못한 택배노동자가 수백명"이라며 "지급받은 마스크도 겨우 하나라 현장에서는 '빨아서 써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노동자들의 안전대책에도 차별이 나타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정규직·직접고용 노동자들과 달리 방역물품을 스스로 구입한다. 전국우체국택배노조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시민들을 만나는 우체국 택배노동자들에게 손 소독과 마스크 착용은 필수인데 방역물품 지급이 현저히 늦어지고 있다"고 했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도 이날 "전국 백화점과 면세점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대책인 마스크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협력업체 노사가 자체로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했다.

우정사업본부에 직접 고용된 집배원과는 달리 우체국 택배노동자는 우체국물류지원단과 위·수탁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로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된다. 윤중현 전국우체국택배노조 위원장은 "우체국 물류지원단은 지난달 29일 공문으로 택배기사들에게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광주우편집중국이 임시 폐쇄된 후에도 방역물품이 지급되지 않은 지역이 상당수"라며 "반면 집배원들에게는 방역물품이 모두 지급됐다"고 했다. 광주우편집중국은 한 직원이 16번째 확진자(42·한국인·여성)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난 4일 임시 폐쇄됐다. 광주우편집중국의 모든 직원에겐 자가격리 조치가 취해졌다.

노조는 자가격리된 광주우편집중국 택배노동자들을 위한 생계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 노조는 "정부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자가격리된 노동자에 대해 70%의 유급휴가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특수고용노동자인 택배노동자들에 대한 생계대책은 기준조차 없다"고 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 관계자는 "현재까지 우체국 택배노동자 총 3662명 중 2256명(62%)에게 마스크가 지급됐다. 품귀현상이 일어나다 보니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이라며 "지급받지 못한 1406명에게는 8일까지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손 세정제는 200여개 작업장 중 50여개소에 보급됐다. 나머지 150여개소에 대해서도 다음주 초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자가격리된 노동자들의 소득 감소분에 대해서는 "우정사업본부에서 고용노동부·질병관리본부·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배달 중지 기간 동안의 생계비 지원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경향신문 2020년 2월 7일 금요일 004면 종합

'신종 코로나' 노동법 Q&A

정부 휴업명령 때 수당은
출퇴근, 업무 중 격리·감염
사업장 자발적 휴업 때만 지급
유급휴가 보장·산재처리 인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갔던 사업장이 휴업할 때 직원들은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하게 한다. 신종 코로나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을까.

경향신문은 6일 신종 코로나로 불가피하게 일을 쉬거나 회사가 휴업했을 때 휴가와 수당 등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의 법 해석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고용노동부 휴업수당 관련 지침 등을 참고했다.

–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정부가 휴업을 명령할 경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

"신종 코로나 자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 정부가 감염법 예방법에 따라 휴업을 명령할 경우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확진환자가 발생한 병원이 보건당국에 의해 휴원 조치되거나, 교육청의 명령에 따라 학교, 어린이집 등이 휴교·휴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 자발적으로 유급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추가 감염 가능성이 낮은 데도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휴업을 결정하거나, 신종 코로나로 인한 생산차질 때문에 공장이 휴업할 경우엔 받을 수 있나.

"이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해 받을 수 있다. 사업장 노동자 중 확진자나 접촉자가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 중국 공장 휴업에 따른 부품 공급 중단으로 휴업하는 경우, 신종 코로나의 간접적 영향에 따른 고객감소·매출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신종 코로나로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됐을 경우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된 경우 사측은 그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노동부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유급병가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유급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7일 고시할 예정이다."

– 회사의 지시에 따라 해외출장을 다녀왔다가 신종 코로나에 감염되면 산업재해가 될 수 있나.

"정상적인 경로를 이탈하거나 사적인 여행 중 감염된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회사 주관 워크숍이나 행사에 참석했다가 감염이 발생한 경우도 업무 중 사고로 볼 수 있어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통상적인 출퇴근 과정에서 감염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다만, 이 경우 신종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노동자가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미관상 이유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사업장은 법을 위반하는 것인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는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 만약 마스크 사용 금지 등 부당한 지시로 감염이 이루어진다면,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김한솔·김지환 기자

hansol@kyunghyang.com

경향신문 2020년 2월 7일 금요일 031면 오피니언

신종 코로나 사각지대서 각자도생하는 현장노동자들

우체국 택배노동자들이 6일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마스크를 달라"고 했고, 지난 4일 22번째 확진자가 나와 폐쇄된 광주우편집중국에서 자가격리된 택배노동자 121명의 생계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다. 전국 31개 우체국에선 전날까지 마스크·손소독제 지급이 없었고, 기자회견 당일부터 부분적으로 지급이 시작됐다고 했다. 이번주에 19개 우체국에서 택배노동자 1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마스크는 1~6개로 천차만별이다. 사비로 방역물품을 사온 그들로선 턱없이 모자라는 숫자다. 한 노동자는 "국민 건강과 밀접한 택배노동자들의 건강에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동생(16번째 확진자)과 설 연휴에 만났다가 22번째 확진자가 된 택배노동자는 열흘간 광주~나주의 마트·농산물매장·식당에 들렀다. 함께 일손을 멈춘 광주 택배노동자들은 우정본부와 계약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다. 그 서러움엔 방역비품도 생계대책도 모두 갖춰진 집배원과의 차별도 자리한다. 정부는 2015년 메르스사태 때도 위탁 노동자에겐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 지급을 보장하지 않은 지침을 내놨고, 올해 역시 "논의 중"인 상태다. 배달과 생계에 쫓기는 택배노동자들이 신종 코로나 유행 속에서 하루하루 각자도생하고 있는 셈이다.

택배뿐이 아니다. 12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 남성이 지난달 20·27일 들른 신라면세점 서울점은 지난 1일 보건당국에서 그 사실을 전달받고도 노동자들에겐 6시간이나 늑장 통보했다. 면세점 판매 직원들 역시 대부분 협력업체 소속이다. 대중교통·판매서비스·전시장·병원·청소 노동자 등까지 '코로나 사각지대'는 넓게 펼쳐져 있다.

노동자들이 겪는 또 다른 고충은 생계 문제다. 공항·숙박업소·매장 이용객이 줄고, 축제·공연도 중단하면서 일자리 한파가 불고 있다. 아파트 분양도 속속 미뤄지면서 건설 현장도 냉기가 돌고 있다. 6일 일자리종합센터 운영에 들어간 전남도처럼, 차별받고 방치되는 협력업체·일용직 노동자들이 없는지 정부와 지자체의 손길이 더 분주해져야 한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법적으로 유급휴가를 받지만, 휴업수당은 현재 회사가 휴업조치를 지시하지 않으면 의무사항이 아닌 터다. 현장 노동자들이 자각 증세가 있으면 더 능동적으로 검진도 받고 휴식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원보조 대책도 빨리 촘촘히 확정돼야 한다.

한겨레 hani.co.kr 2020년 2월 7일 금요일 019면 사람

"10년만에 '근로기준법 주해' 개정판 냈어요"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출판기념회

"이 책이 노동이 존중받고 노사가 화합하며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가 보호받아 좀 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사회를 이루는 데 한 점 보탬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최근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연구회) 회장인 김선수 대법관이 〈근로기준법 주해〉 제2판 발간사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연구회는 초판을 낸 지 10년 만에 개정판을 내고 지난달 31일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철수 서울대 노동법연구회 회장, 강성태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사전행사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참석했다. 2010년 9월 나온 초판은 노동 분야의 기준이 되는 '근로기준법' 조문에 대한 표준적 해석과 판례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왼쪽부터 이미선 헌법재판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김선수 대법관, 김지형 전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제공

개정판은 초판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이후 법이 개정돼 추가된 노동 문제에 대한 해석을 더하고 대법원과 하급심의 새로운 판례를 소개했다. 예를 들어 초판에 적지 못한 '최저임금법' 해석이나 지난해 처음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 해석이 추가됐다. 필자로는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 이미선 헌법재판관,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김민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홍준호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박상훈 화우 변호사 등 연구회 회원들이 두루 참여했다. 편집위원과 필자들은 원고 독회와 토론·수정 등 책 준비 작업에 2년6개월을 투자했다. 편집위원회 간사인 마은혁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초판 필자가 22명이었는데 개정판은 44명으로 늘었다. 3~4차 개정을 책임질 필자를 확충한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책은 총 3권으로 2768쪽에 이른다.

판사, 변호사, 학자, 노동정책 담당자 등 500여명의 회원이 가입한 연구회는 2005년 창립됐다. 2006년 대법원 산하 연구회로 공식 편성돼 노동이론과 판례 등을 연구해왔다. 김지형 전 대법관이 초대 회장이었다. 매달 한차례 주제를 정해 회원들이 발제와 토론을 하는 정기 세미나를 열고 있다. 2015년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서를 발간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東亞日報 2020년 2월 7일 금요일 A16면 사회

中企 36% "출산휴가제도 업무 공백 우려"

실제 제도도입 74%에 그쳐

서울시 중소기업 대표나 인사담당자들은 여성의 각종 경력단절 예방 제도를 잘 알면서도 인력 대체, 비용 증가, 동료 간 형평성 등을 이유로 잘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과 서울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난해 서울 소재 기업 233곳의 대표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 활용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조사 대상 대다수는 중소기업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98.7%는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알고 있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태아 검진시간 제공 등의 제도도 각각 94.0%와 90.1%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제도의 시행률은 인지 여부에 못 미쳤다. 출산휴가는 74.2%만 허용하고 있었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행하는 기업은 46.4%에 그쳤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태아 검진시간 제공도 각각 20.6%, 17.6%로 적었다.

기업들은 출산휴가를 시행하면 업무 공백(36.0%), 유급휴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32.0%),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17.3%) 등이 불거질 것을 우려했다. 육아휴직자가 있는 기업의 61.4%는 대체인력 고용 없이 업무 배치 조정으로 해결한다고 답했다. 새 정규직을 채용(22.7%)하거나 계약직 대체인력을 고용(15.9%)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

조영미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은 "기업이 여성 인력 채용에 부정적이지 않도록 휴직자 대상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여성인력 양성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경향신문 2020년 2월 7일 금요일 012면 사회

한국지엠 카젬 사장과 법인 파견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사측 관계자 2명과 사내하청업체 대표 17명도 기소의견

고소 2년 만에… 노조 "상습·고의적 범죄, 엄벌에 처해야"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과 한국지엠법인이 불법파견 노동자를 사용해 파견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견법위반으로 회사를 고소한 지 2년 만이다.

6일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지난달 말 카허 카젬 사장과 한국지엠 법인에 파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한국지엠 관계자 2명과 사내하청업체 대표 17명도 기소의견으로 함께 송치됐다.

한국지엠비정규직 노조는 카허 카젬 사장이 취임한 2017년 9월 이후 한국지엠이 부평·군산·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에 자동차 차체조립과 부품생산 등을 맡겨왔다며 2018년 1월 회사와 카허 카젬 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은 제조업 생산공정 업무에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회사가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후 현장 조사 등에 착수한 인천북부지청은 2018년 9월 약 900명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한국지엠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강수사를 지휘하며 수사가 장기화됐다.

한국지엠 사장이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2005년에도 한국지엠이 불법파견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이듬해 닉 라일리 전 사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닉 라일리 전 사장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단이 이어지고 2013년에는 대법원 확정선고가 내려졌지만,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문제를 방치했다.

이후 하청업체 노동자 5명이 대법원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음에도 한국지엠은 소송 참여자만 직접고용하는 데 그쳤다. 이후 한국지엠은 정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은 물론, 과태료 부과 처분도 모두 거부했다. 그사이 한국지엠 비정규직들은 인력구조조정 때마다 1순위 타깃이 돼 공장을 떠났다.

임권수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장은 "한국지엠은 불법파견과 관련된 범죄를 한번도 아니고, 상습·고의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며 "불법파견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무거운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한국경제
2020년 2월 7일 금요일 A29면 사회

"사외 2차 하청도 불법파견" … 기업 줄소송 우려

1심 법원 "현대차, 글로비스 재하청 근로자 직접 고용하라"

현대자동차 2차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도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다시 나왔다. 직접적인 생산라인에 종사하지 않는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업무내용과 관계없이 현대차가 모두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산업계에선 유사한 소송이 잇따르고 불법파견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되는 등 기업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원 "파견법 피하려 2차 하청 끼워넣어"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도영)는 현대차 하청 근로자 68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전체 원고 중 20여 명이 현대차가 아니라 현대글로비스 등과 계약을 맺은 2차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는 2016년 4~10월 현대차 울산공장 간접 생산 공정에서 근무하는 하청업체 근로자 120여 명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현대차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며 현대차에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법원은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대차-현대글로비스 간 도급계약과 현대글로비스-2차 하청업체 간 도급계약은 도급작업명, 도급금액 등 내용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며 "2차 하청 근로자들은 사실상 현대차의 관리와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차는 2차 하청 근로자들이 현대글로비스가 자체 제작한 '웹지스'에 의해 업무가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현대차가 제공하는 정보를 재가공한 것에 불과하다"며 "명시적인 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2차 하청업체를 끼워넣는 방식으로 파견법을 손쉽게 회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 직후 금속노조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는 법원 판결에 따라 모든 하청 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하고 사내하도급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13일에는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 58명에 대한 판결이 나온다.

'불법파견 범위' 확대 논란

재판부 "2차 하청업체 근로자 사실상 현대차 관리·지휘 받아"

기업 "산업현장 이해 부족한 판결"

"2차 하청업체는 물류 전달업무 직접 생산라인에 종사하지 않아 일괄적 불법파견 인정은 부당"

현대차 불법파견 인정범위 확대 주요 판결

날짜	법원	판결 내용
2014년 9월 19일	서울중앙지법	2차 하청업체 근로자 불법파견 최초 인정
2017년 2월 10일	서울고법	〃
2019년 8월 22일	서울중앙지법	간접공정 근로자 불법파견 인정 하청업체 관리자 불법파견 인정
2020년 2월 6일	서울중앙지법	간접공정 및 2차 하청업체 근로자 불법파견 인정
2020년 2월 13일	서울중앙지법	2차 하청업체 불법파견 소송 선고 예정

◆"제조업 불법파견 줄소송 우려"

업계에선 외부에 있는 물류공장에서 부품을 받아 각 생산라인에 전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2차 하청 근로자까지 직접고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 사건의 2차 하청업체(부품 물류사)들은 15~20년 동안 독자적인 물류센터, 장비, 시설 등을 보유하고 물류업무를 해왔다"며 "같은 2차 하청 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정을 분리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은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현대차 2차 하청업체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첫 판결은 6년 전 나왔다. 2014년 9월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차 2차 하청업체 근로자를 포함한 1100여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현대차와 2차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사이의 '묵시적 파견계약' 관계를 인정했다. 2017년 2월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고, 3년째 대법원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논리대로라면 2차를 넘어 3·4차 하청업체까지 불법파견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대형 로펌의 한 노동 전문 변호사는 "명시적 계약관계를 거치지 않은 2차 하청근로자들에게 계약의 예외로 불법파견을 인정해버리면 불법파견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알 수 없다"며 "기업들의 직접고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정민/신연수/장창민 기자 peux@hankyung.com

경향신문 2020년 2월 7일 금요일 012면 사회

"현대차 하청노동자, 현대차 직원 맞다"

법원 "불법파견" 재차 판결
노조 "모든 하청 철폐해야"

현대자동차 2차 하청업체에 소속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차 직원이 맞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현대차는 그간 2차 하청업체와는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만큼 이들 업체 소속 노동자는 현대차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장 내 생산과 관련된 일을 한 모든 노동자가 사실상 현대차로부터 '불법파견'된 것으로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현대차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약 70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에는 현대차가 직접 도급계약을 맺은 1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뿐 아니라 현대차의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등과 하도급계약을 맺은 2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도 함께 참여했다.

앞서 현대차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각급 법원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줄줄이 승소하자, 현대차는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특별채용하는 방식을 꺼내들었다. 하지만 대상은 '직접생산 하도급'으로 제한했다. 1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컨베이어벨트 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만 특별채용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자재와 부품을 생산라인에 공급하거나, 완성차의 품질검사 업무 등을 맡은 노동자와 2차 하청 노동자들 일부가 재판에서 승소했음에도 그동안 별다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이에 2차 하청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현대차 비정규직노조가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2차 사내협력업체는 현대차에 소속 근로자들을 파견했고, 현대차가 이들을 사용하여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을 뿐, 1차 사내협력업체가 이들을 관리하거나 지휘·명령권을 행사했다는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 현대차가 실질적인 사용자였다는 것이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는 "현대차 내 모든 사내하청은 1차 하청, 2차 하청 구분 없이 모두가 위장도급이며 불법파견임을 또다시 확인했다"면서 "현대차 내 모든 사내하청을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한국일보 2020년 2월 7일 금요일 W12면 지방

이 와중에 목포시내버스 기습 파업

어제 노사 임금협상 결렬
市 전세버스 투입 등 대책 마련
기존 운행 40%… 시민 불편

전남 목포 시내버스가 6일 기습 파업에 들어갔다. 목포시는 임금인상에 따른 소요액 13억3,000만원을 전액 지원키로 했는데도 파업이 강행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이날 오전 5시부터 목포지역 내 운행 시내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 운행에 대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사는 그 동안 월 20만원에 해당하는 9% 임금인상과 근무조건 변경 등을 놓고 교섭을 벌였으며, 한때 타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갑자기 협상이 결렬되고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시민들은 출근길 교통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날 오후 총 80대의 전세버스를 투입하고 대체버스의 원활한 운영과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시청 직원을 안내요원으로 배치키로 했다. 또 파업기간에 한해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하는 등 자체 비상 수송 대책을 마련했다. 목포 시내버스는 총 168대가 왕복 921회를 운행 중으로, 이번 무료 전세버스 투입은 기존 운행노선의 40

% 수준이다. 이번에 운행하게 될 전세버스에는 버스 도착 정보를 알려주는 버스정보시스템(BIS) 단말기가 부착돼 있지 않아 불편이 예상된다.

특히 노사협상 과정에서 사측이 임금인상분에 대한 지원 확약서를 시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시민들의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시는 적자보전을 명목으로 하는 지원금은 추경예산에 편성할 예정이지만 예산심의는 시의회의 고유권한이고, 지원 확약서는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사측은 지난해 재정지원금 33억원, 유가보조금 3억원을 비롯해 공공성 강화 재정지원, 교통카드 결제 수수료 등 목포시와 전남도 등으로부터 60억여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매년 적자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임금인상폭 등을 알 수 없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며 "시의회에서 추경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회사 측에서 지원 확약서를 구두로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한국경제 2020년 2월 7일 금요일 A17면 산업

르노삼성, 상시 희망퇴직 돌입

노조 "사실상 감원 수단" 반발

르노삼성자동차가 상시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내수 판매가 부진한 상황에서 르노 본사의 수출 물량 배정이 늦어지면서 필요한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6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은 지난 5일 사내 홈페이지를 통해 희망퇴직 접수 공고를 냈다. 지난해 9월 시행한 희망퇴직과 달리 이번에는 신청 기한을 따로 두지 않았다. 상시로 희망퇴직을 받겠다는 의미다. 희망퇴직자에게는 퇴직금과 근속 연수에 따라 최대 36개월분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르노삼성은 희망퇴직은 새 출발을 희망하는 직원들을 위한 '뉴스타트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다른 완성차 업체와 달리 르노삼성은 정년퇴직 등 자연 감소율이 낮다"며 "퇴직 희망자가 일부 있어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노동조합에 먼저 계획을 설명했으며 인위적인 구조조정 차원에서 하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생산 물량 감소를 감안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르노삼성의 지난해 생산량은 16만4941대로, 전년보다 23.5% 급감했다. 노조 파업과 판매 부진이 겹친 탓이다. 오는 3월이면 닛산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로그 수탁계약도 끝난다. 연 10만 대에 달하던 생산 물량이 작년에 이미 35%가량 줄었다.

이런 가운데 소수 노조인 금속노조 르노삼성지회는 "회사가 평화기간을 두고 집중 교섭하는 상황에서 희망퇴직을 공고했다"고 반발했다. 회사가 구조조정에 나서려 한다는 주장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매일경제 2020년 2월 7일 금요일 A20면 IT

'주52시간' 中企지원 위해 벼락치기 SW발주 금지

과기부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

소프트웨어(SW) 개발자 A씨는 발주사의 후려치기식 발주로 늘 야근을 하기 일쑤였다. 정부 기관이 보통 12월까지 사업을 마쳐야 해 마감기한은 항상 12월인데, 미리 준비해 1월에 발주해도 될 것을 공공기관이 다른 일을 하다가 뒤늦게 3~4월에야 발주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마감은 동일한데 사업 기간만 줄어드는 셈이다. 여기에 더해 도중에 과업의 내용을 변경하고 이런저런 내용을 추가해달라고 하면 '주 52시간 근무'는 꿈도 꿀 수 없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잘못된 SW 발주 관행을 단속하겠다고 나섰다. 내년부터는 A씨와 비슷한 애로 사항이 다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SW 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는 50~299인 규모 중소 SW 기업 등이 재난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어도 납기를 불가피하게 맞춰야 할 때 '특별연장근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보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보완책은 과기정통부가 추가로 중소 SW 업계 애로 사항을 수렴해 마련한 방안이다.

중소 SW 기업은 전체 SW 기업의 8%(1588개)로, 이 가운데 주 52시간 초과 근무자가 있는 사업장 비율은 지난해 12월 기준 15.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SW 개발 사업이 적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전수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발주기관은 사업 발주 시기를 사업 수행 전년 9월에 결정하고, 발주 기관은 사업 정보를 시스템(www.swit.or.kr)에 등록하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공공 SW 사업 발주금액은 4조 7890억원에 달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또 발주처가 도중에 프로젝트 내용을 바꿀 때는 기관별로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위원회 의결을 받아야만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SW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도 힘을 실을 예정이다. SW 프리랜서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올해 1분기부터 서울 구로 G밸리 등에서부터 표준계약서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표준계약서를 도입한 기업에는 공공사업 수주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승윤 기자

경향신문 2020년 2월 7일 금요일 010면 사회

'사찰노예' 고발에… 종교 특성상 '착취' 어렵다는 경찰

지적장애 50대 32년간 청소·잡일 노동 착취… 주지가 폭행도
경찰, 명의도용 아파트 매매 혐의만 '부동산실명법 위반' 송치

지적장애인 ㄱ씨(54)는 1985년 서울 노원구의 한 사찰에 맡겨진 뒤 32년 동안 청소와 잡일을 했다. '스님'으로 불렸지만 하루 평균 13시간을 일하며 명절에만 쉴 수 있었다고 한다. 주지 ㄴ씨(69)는 ㄱ씨가 제대로 일하지 않는다며 폭행하곤 했다. ㄱ씨 명의로 아파트를 매매하고 은행 거래를 하기도 했다. ㄱ씨는 2017년 12월 사무장의 도움으로 사찰을 빠져나왔다. ㄱ씨의 법률지원을 맡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해 7월 ㄴ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주지 ㄴ씨에 대해 ㄱ씨를 폭행하고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ㄱ씨 명의를 도용해 부동산 거래를 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종교기관의 특성상 ㄱ씨가 노동력 착취를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노동력 착취라고 주장하지만 절에서는 집안일을 하는 것처럼 스님들이 힘을 합쳐 잡일을 하는 '울력'이라는 문화가 있다"며 "폭행의 경우 가해자가 앞서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폭행 사건들 외에는 피해자의 일관성 있는 진술이나 목격자가 없어 일시·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 끝에 ㄴ씨가 ㄱ씨의 이름으로 노원구의 아파트를 거래해 시세차익을 챙긴 사실을 확인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ㄴ씨는 ㄱ씨 이름을 빌려 은행 거래도 했다. ㄴ씨는 ㄱ씨를 은행에 데려가 계좌를 개설한 뒤 도장을 넘겨받아 사찰 운영비의 입출금 용도로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불법재산의 은닉, 강제집행의 면탈, 자금세탁 등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해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혐의만 적용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ㄱ씨 노동이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ㄴ씨 폭력에 따른 강제노동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2018년 ㄱ씨는 ㄴ씨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법원이 벌금 500만원으로 약식명령 처분하자 ㄴ씨는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8월 법원은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작업을 빨리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함을 치고 엉덩이를 걷어찼다"며 "2015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2회에 걸쳐 ㄱ씨를 폭행했다"고 판시했다.

최정규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은 "일부라도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은 다행이지만 노동력 착취에 대해 수사기관이 보여주는 태도는 실망"이라며 "종교기관의 특성이라며 면죄부를 준다면 장애인 학대가 한국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경제 확대경 확 늘어난 실업급여 혜택 … 판치는 모럴 해저드

"퇴직금 600만원 대신 실업급여 1100만원 받게 해줄게요"

노사가 짜고 위장해고 기승
사업주는 퇴직금 안 주고
근로자는 실업급여로 더 챙겨

재취업하고도 실업급여 수령
월급은 현금… 출퇴근은 선불카드
사업자도 고용보험료 부담 피해

부정수급 방지대책 구멍 숭숭
정부가 실업기간 되레 늘리는 꼴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 못 받을 텐데 받게 해드릴까요? 대신 퇴직금은 안 드리는 걸로…."

지난해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3년 가량 근무한 뒤 퇴사하는 교사에게 원장은 은밀한 거래를 제안했다. 이직 사유를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해고된 것으로 해줄 테니 거래를 하자는 것. 이 교사는 원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퇴직금 600만원 정도를 포기하는 대신 5개월간 총 1100만원가량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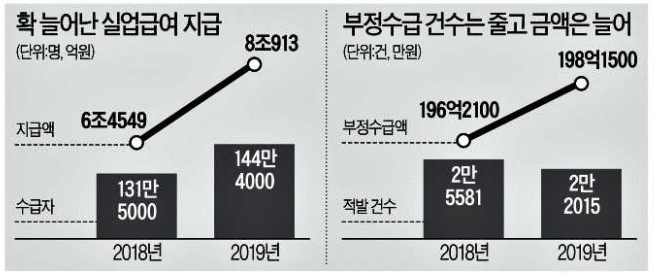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며 실업급여 혜택을 대폭 늘리자 수급자의 모럴해저드가 만연하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 문턱을 낮추고 실업기간 지원금을 올렸지만 부정수급에 대비한 안전장치 마련에는 소홀해 정부 정책이 실업기간을 되레 늘리는 등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정수급 건수는 줄고 금액은 늘어

6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2019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부정수급 건수는 2만2015건으로 전년(2만5581건)에 비해 3566건(14%) 줄었다. 하지만 부정수급액은 198억1500만원으로 전년(196억2100만원)보다 증가했다.

정부는 2018년 7월 아르바이트 청년 등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내걸면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크게 늘려왔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에만 51만 명이 늘어 12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실업급여 지급액을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고 상한액을 하루 6만6000원(월 198만원), 하한액을 6만120원(월 180만3600원)으로 정했다. 수급요건만 갖추면 최소 4개월간 최저임금(올해 기준 월 179만5310원)보다 많이 받는다는 얘기다.

가령 월평균 200만원을 받으며 1년 근무한 30대 근로자라면 실직 후 최대 5개월(150일)간 총 900만원가량을 받게 된다. 회사에 다니는 동안 이 근로자가 낸 고용보험료는 한 달 1만6000원으로, 총 19만2000원이다. 수익률로만 따지면 최고의 보험상품인 셈이다.



자료: 고용노동부

◆노사 공모 부정수급엔 속수무책

정부가 부정수급 처벌을 강화했지만 속수무책이다. 부산 어린이집 사례처럼 노사가 공모해 이직 사유를 거짓 신고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올해 8월부터는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 이하로 형량이 강화된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 노사가 서로 약점을 잡고 은밀하게 거래하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다.

정부는 부정수급을 가려내기 위해 고용보험 전산망은 물론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전산자료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 이 같은 방식으로 사장과 근로자 33명이 짜고 실업급여 8100만원을 챙긴 사례를 적발했다. 이 밖에 근무하지도 않는 친척(처형)에 대해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를 해 실업급여를 타게 하거나,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들 명의로 식당을 개업한 사례도 있었다.

'뛰는 단속 위에 나는 불법'인 경우가 많다. 가령 재취업했는데도 월급을 현금으로 받으면서 고용보험 등록을 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는 게 대표적이다. 사업주는 고용보험료 부담을 피하고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서다. 이런 경우 출퇴근 교통카드는 추적이 가능한 신용카드형이 아니라 무기명 선불형카드를 쓴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사가 공모해 이직 사유를 거짓 신고하거나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행정시스템으로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주로 주변 제보로 확인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 경우 선처 없이 엄중처벌된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한겨레 hani.co.kr
2020년 2월 7일 금요일 012면 사회

직원 극단적 선택까지 부른 EBS미디어 '황인수의 갑질'

〈EBS 자회사 대표〉

'직장내 괴롭힘' 사건 일지 입수

취임 직후부터 "너흰 C급·D급" 폭언
업무차량 직원에도 "똥차" "감시하냐"

'우울증 진단' 부장급 병가 요청하자
"반항하냐…강제 출근 시켜라" 지시
정신적 충격에 극단선택 시도…입원

황 대표 "업무처리 문제 지적한 것"



교육방송(EBS) 자회사인 이비에스미디어 황인수(**사진**) 대표의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황 대표의 갑질로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이 직원 외에도 최소 3명이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비에스미디어는 '방귀대장 뿡뿡이' 등 교육방송 캐릭터 사업권과 '보니하니' 등의 방송권을 가진 회사다.

교육방송에서 30년 이상 피디(PD)로 근무한 황 대표는 지난해 7월 이비에스미디어 대표로 취임했다. 6일 〈한겨레〉가 입수한 이비에스미디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일지를 보면, 황 대표는 취임 직후 직원들 앞에서 "나는 계속 에이(A)급들과만 일해왔다. 너희는 시(C)급, 디(D)급이다. 너희들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겨레〉와 만난 복수의 이비에스미디어 직원들은 "취임 이후 첫 두달이 가장 강도가 심했고,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갑질과 괴롭힘 행위가 이어졌다"고 증언했다.

차량 문제가 대표적이다. 황 대표는 업무용 차량이었던 '제네시스 G80'을 내켜 하지 않고, 리무진 시트가 포함된 '기아 K9' 최상위 옵션 차량을 원했다고 한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 인사와 총무 담당 직원한테 폭언과 고성을 반복했다. 〈한겨레〉가 입수한 녹취를 보면, 황 대표는 기존 차량에 타며 "누가 이런 차를 가져왔냐. 반납해야지. 양아치가 담배 물고 타던 차야?", "K9 뽑아줄 수 있는 데로 가란 말이야. 뭐 하러 이렇게 지금 똥차를 타고 있어" 등과 같은 폭언을 했다.

황 대표는 주말 차량 이용 일지 작성을 위해 '대략적인 일정을 알려달라'는 직원한테 "내가 너한테 차량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야? 너네 나 감시하는 거냐, 길들이냐?" 등의 말을 했다. 또한 고성으로 "○○○, 너 지금 사적 사용? 블랙박스 열어봤냐?"라고 했다.

이런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부장급 실무 책임자 ㄱ씨가 지난 1월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하며 병가 사용을 요청하자, 황 대표는 "제출한 진단서로는 출근 가능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경영지원팀장한테 ㄱ씨를 '강제 출근'시키라고 지시했다. 황 대표는 당일 임원회의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라는 거 하라고, 왜 지시사항을 불이행하는 거야. 반항하는 거야?"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을 받은 ㄱ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ㄱ씨는 이후 의무기록 사본, 자살 시도 구급 기록 등을 노동조합에 제출하고 병가를 얻어 폐쇄 병동에 입원했다.

황 대표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폭언과 고성을 하지 않았다. 직원들을 최고로 대우해주려고 노력했다. 몇몇 직원들의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어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이라며 "출근 지시는 그 코드(정신 질환)로 장기 병가를 주면 산업재해 판정 등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는 노무사의 의견을 받아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완 기자 funnybone@hani.co.kr

한국일보
2020년 2월 7일 금요일 A18면 경제

"노조추천 이사제 등 합의… 선 넘지 않아"

윤종원 기업은행장 '혁신금융' 다짐



"노조와의 합의는 신뢰를 확인하고 기대를 맞춰가는 과정이었다. 상대 입장은 이해하되, 선을 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역대 최장의 '노조 출근저지 투쟁'에 막혀 임명 27일 만인 지난달 29일 뒤늦은 취임식을 가진 윤종원(**사진**) IBK기업은행장은 6일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한국일보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행장은 노조와 △희망퇴직 문제 조기 해결 △정규직 전환직원 정원통합 추진 △직무급제 도입 등 노조 동의 없는 임금체계 개편 금지 △임원 선임절차 투명성과 공정성 개선 △노조추천이사제 추진 △질병 관련 휴직 확대 등 6가지 내용이 담긴 합의안에 서명했다.

이를 두고 은행 안팎에서는 '윤 행장이 노조에 백기투항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최근 계열사인 IBK저축은행 노조원들이 임금단체협상을 이유로 본점 앞 피켓 시위에 나선 것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에 대해 윤 행장은 "노조와의 (대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면서도 "직원 삶의 질 향상과 은행 발전을 위한 고민을 내놓은 것이고, 앞으로도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권 노조의 숙원 사업이자 뜨거운 감자였던 노조추천 이사제 도입 방침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생각을 많이 한 이슈"라고 입을 뗐다. 그는 "직원들의 이해와 여론을 경영 측면에서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왔고, 직원 상당수가 조합원인만큼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행장이 약속한 게 아니라 (노사가) 같이 약속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도 도입과 도입 이후 운영 과정에 노사가 함께 노력해야 성과가 날 것이란 의미다. "(노조추천이사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면 제도가 (금융권에) 잘 번질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혁신금융'과 '바른경영'에 나설 것도 다짐했다. 기업 성장단계에 따른 고객들의 다양한 금융수요를 충족하고,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등 신사업 지원 금융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베테랑 직원 6~7명으로 구성된 혁신 태스크포스(TF) 조직도 꾸릴 방침이다.

허경주 기자

東亞日報 2020년 2월 7일 금요일 B02면 경제 금융

기업은행이 불지핀 '노조추천이사제'… 금융권 번지나 촉각

산업은행 새 노조도 도입 공언
총선 앞두고 노동계 압박 커질 듯
일각 "의사결정 지연 등 부작용"
금융위 "고려할 사항 많다" 신중

IBK기업은행 노사가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다른 금융공공기관 노동조합들도 가세하면서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노조들이 공동 전선을 꾸리고 정치권을 압박할 것으로 보여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노사 합의사항에 따라 내년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 자리에 노조가 추천하는 인물을 선임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관련 사항을 검토 중이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기업은행은 행장이 사외이사를 제청하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나 정부도 합의안에 따라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본다"며 "만약 방침을 바꿀 경우 4월 총선 국면을 활용해 정치 쟁점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노조는 윤종원 행장에 대해 27일간의 출근저지 투쟁을 벌인 끝에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또 다른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 역시 올해 초 새로운 노조가 꾸려지자마자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은 노조 관계자는 "(도입을 위해) 기타 금융공공기관 노조와 연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노조추천이사제는 노조가 추천한 인물을 사외이사로 앉히는 제도다. 근로자 대표가 직접 사외이사가 되는 노동이사제보다는 노조의 개입 강도가 약하지만, 노조를 대표하는 인물이 경영진에 자리한다는 측면에서는 다를 바 없다.



노조는 대외적으로는 노조추천이사제를 통해 조직의 방만 경영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속내는 금융권 노조의 사측에 대한 요구사항을 더욱 쉽게 관철하려는 목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동안 금융권 노조는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매년 시도해왔다. 2017년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까지 매년 노조가 선임한 인물을 사외이사에 앉히려 했지만 모두 주주총회에서 무산되거나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의 반대에 부딪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임에도 번번이 도입에 실패한 것은 제도 도입으로 부정적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우려 때문이다.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이사회에서 경영상황과 상관없는 노조의 요구사항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던 직무급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 인력 구조조정 등이 사실상 중지될 수도 있다. 가뜩이나 '철밥통'에 고연봉 일자리라는 인식이 강한데 사외이사까지 금융노조를 대변하는 인물을 앉혀야 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도 노조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대놓고 반대하지 않지만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실제로 올해 초 수은 노조가 추천한 인물의 이사 선임을 반대했다. 금융위 역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에 발을 빼는 분위기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며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한국경제 2020년 2월 7일 금요일 A24면 증권

"운용 독립성 없는 스튜어드십코드 국민연금 '연금사회주의' 부추긴다"

국민연금 독립성 확보 세미나 최광 전 복지부장관 날선 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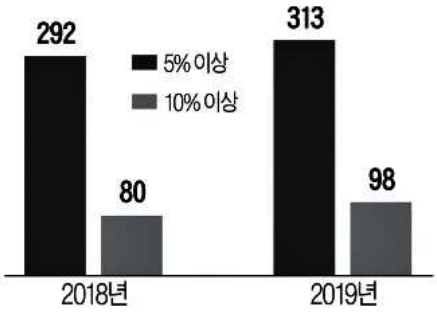
한국 국민연금처럼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도입된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의 원칙)는 연금사회주의로 변질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이 2018년 채택한 현행 스튜어드십코드는 기업 경영을 옥죄고 기업 경쟁력도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돼 폐지하는 게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연금 이사장을 지낸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6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 기조 발제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 코스닥협회 등 경제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최 전 장관은 "기관들이 고객 돈을 자기 재산처럼 운용하겠다는 원칙인 스튜어드십코드는 도입 취지 자체는 매우 훌륭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며 "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등 한국처럼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사회주의로 직결될 수 있고 기금 운용의 근간을 흔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국민연금 지분율 높은 기업 (단위:개)



최 전 장관은 "스튜어드십코드 총괄 조직인 기금위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도 위원장과 위원을 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는데, 이는 기업의 모든 중요 정보가 정부에 다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세계 어느 나라를 둘러봐도 국민연금처럼 기업과 기업가를 옥죄고 투자 기업의 모든 측면에 관여하는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사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는 보완이 아니라 아예 폐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최 전 장관은 "국민연금의 특정 기업 지분율이 10%가 넘어가면 나중에 매각이 쉽지 않아 문제가 생긴다"며 "국민연금이 개별 기업에 5% 이상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적은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국민연금은 비유하면 연못에 고래가 앉아 있는 셈"이라며 "노르웨이는 국내에 일절 투자할 수 없게 돼 있다. 우리도 이제 해외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곽관훈 선문대 경찰법행정학과 교수는 "투자 전문성이 없는 수탁위 위원들이 주주권 행사 의사결정을 내리는 현 시스템에서는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 판단 및 의결권 행사는 투자전문가에게 맡기고 현행 수탁위는 이들의 의사결정을 감독하고 책임을 묻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최성현 상장협 정책본부장은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원 해임 청구,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정관 변경 요구 등도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고 기관들의 '5% 룰 공시' 규정도 완화돼 국내 기업들은 해외 투기자본 공격에 취약해졌다"며 "국민연금은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국내 기업과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매일경제 2020년 2월 7일 금요일 A24면 증권

"영향력 커진 국민연금, 독립성 확보 우선돼야"

한경연·경총 등 세미나 개최

"국민연금은 기업 간섭보다 독립성 확보가 우선이다."

국민연금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가 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주최했다. 올해 주총부터 국민연금은 경영참여 선언을 하지 않고도 이사해임 청구 등이 가능해지는 등 영향력이 막대해졌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정부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관치와 연금 사회주의 논란에서 벗어나기 힘든 구조라는 게 경제단체들 주장이다.

기조 발제자로 나선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 최종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간 15시간 정도만 기금 운용에 투입한다"며 "기금운용 경쟁자인 글로벌 투자은행(IB) 최고경영자들은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누비며 24시간 365일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전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국민연금위원회'를 복지부에 설치해 감독 기능만 수행하게 하고 △국민연금위원회 산하에 기금운용위원회를 두되, 기금운용 전문가들로만 위원들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이다. 당연직 위원 5명은 기획재정부 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다. 위촉위원 14명은 사용자 대표 3명, 근로자 대표 3명, 지역가입자 대표 6명, 연구원장 등 전문가 2명이다. 최 전 장관은 "기금위에 전문가가 전무한 상태"라며 "한은 금통위처럼 기금위 위원들도 기금운용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기금운용위원회 사용자 대표인 이상철 경총 수석위원도 이해관계자 중심의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적 연기금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모두 민간 투자 금융 전문가들로 구성해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 수익률 극대화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관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기금의 투자·운용이나 기업경영에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이 정치적 판단에 휘둘릴 수 있다"고 전했다.

정승환 기자

매일경제 2020년 2월 7일 금요일 A21면 기업

"중기 경영안전자금 긴급 지원"
김기문 회장, 문희상 의장에 요청

중소기업 10개 입법과제 전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사진)이 6일 낮 12시 국회 사랑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최한 '중소기업인 오찬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관련 주요 입법과제 10건을 전달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문 의장을 비롯해 이기우 의장 비서실장, 이계성 정무수석, 최광필 정책수석 등 7명이 참석했으며, 중기중앙회에서는 김 회장, 서병문·권혁홍 수석부회장, 배조웅·노재근·노상철·심승일·권영길·한병준 부회장 등 9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김 회장은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국회에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여야가 민생경제 해결을 위해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한 것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라면서 "중소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경제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기를 부탁 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통과된 중기 관련 법안에 대한 감사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 보완입법(근로기준법),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최저임금법) 등의 현안 입법을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납품대금 조정 제도 활성화 및 기술 탈취 행위 제재 강화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확대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 완화 △유통상가단지 육성 및 지원 방안 마련 △온라인 시장 공정거래 기반 조성 △주휴수당 노사 자율화 등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지난 3일 총 9대 분야 260건의 '제21대 총선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덕주 기자

한국일보 2020년 2월 7일 금요일 A31면 오피니언



아침을 열며

성과배분의 중요성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작년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2.0%로 저성장 국면을 이어 갔다. 더구나 재정투입에 의한 성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나마 2%의 성장도 향후에는 어려워질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고령화 진행이 더욱 빨라져 생산가능인구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 기업 활동을 촉진할 획기적인 대책들이 나와야 한다. 투자유인도 강화하고 규제도 완화하는 등 기업들의 시장여건을 바꿀 방안도 시급하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기업내부 구성원들, 즉 노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혁신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 기업들의 생산성이 경쟁국들에 비해 낮다는 것은 이제 만성적인 과제이다. 서비스업은 선진국들 수준에 한참 뒤처져 있고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에 비해 높기는 하지만 수출시장에서 확실한 우위를 가진 제품들은 줄어들고 후발 제조국들의 부상에 고전하고 있는 애매한 수준이다. 아울러 최근 몇 년 동안 제조혁신과 일터혁신을 강화하고 있지만 현장혁신이 자동화나 로봇투입에 집중되어 일자리를 줄이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인력을 활용한 기업경쟁력 제고 전략을 흔히 고진로 또는 하이로드 노선이라고 한다. 이는 인력을 비용요인으로 보고 인건비를 줄이거나 임금을 낮추려는 경쟁전략인 저진로 노선과 대비된다. 저진로 노선은 당장은 기업들에 가격경쟁력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선진국과의 고부가가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고진로 혁신을 위해선 종업원들의 생산성 향상노력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우리 노동자들이나 노조는 생산성 문제를 두고 여전히 관망하거나 무시하는 형편이다.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혁신의 결과로 종업원들에게 돌아오는 성과가 불투명하게 결정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성과배분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기업의 수익이 어떻게 창출되었는지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수익 중 일부를 성과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수준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수익의 처분과정에서 임금인상 재원을 놓고 노사 간 다툼이 발생한다. 또 흔히 사전적인 약속보다는 사후적인 결정에 의존하다 보니 주주나 경영진들의 몫이 일반 종업원들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다는 비판과 불평이 나오곤 한다.

설령 평균적으로 종업원들에게 충분한 금액의 성과배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회사안에서 사업부마다 차이가 큰데 그 차이가 직원들의 기여나 노력보다는 경기상황이나 제품기술 향상에 의존한 경우가 많다 보니 불합리한 성과보상 제도로 인해 인재들의 이직을 불러오는 이유도 된다.

이미 선진국들은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면서 성과배분제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발해서 적용하고 있다. 투자가 늘어서 또는 생산설비가 향상되어서 나온 수익과 구분되는 종업원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에 의한 생산성 향상과 그로 인한 수익증대를 측정하고 공정하게 성과를 배분하는 기법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서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제도도입에 대한 노사 간 신뢰가 부족하고 제도를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노력보다는 자동화, 무인화, 생산기지 이전이 더 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성장 시대에 분명하게 다가온 사실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 노력과 그로 인한 추가적 성장 그리고 그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제도가 없이는 산업현장을 인력중심으로 활성화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고 이전 일하는 방식의 타성을 벗어나 제품을 혁신하고 그래서 기업과 일자리가 같이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이 가능하려면 구성원들이 추가적 성과를 공동으로 창출하고 공정하게 배분하는 제도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저성장 시대에 임금인상에만 매달리는 노사관계를 벗어나 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배분하는 노력이 노사에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이재갑 고용노동·성윤모 산업통상자원·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오거돈 부산시장, 문 대통령, 조용국 (주)코렌스 회장, 서영기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의장. 이날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차원에서 참석자들은 발언할 때를 제외하고 대부분 마스크를 쓴 채 진행됐다. 강정현 기자

마스크 쓰고 부산 찾은 문 대통령 37차례 "부산"

300명 모아 일자리 협약식 행사
월 1회꼴 PK행 … 2명 발열로 퇴장
한국당 "선거 임박해서 가야 했나"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부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 참석차 부산을 찾아 연설하면서 부산을 37번 언급했다. "부산의 꿈은 대한민국의 꿈" "부산은 일제 강점기 조선 방직공장, 부두노동자들이 힘을 합쳐 일제의 노동착취에 저항했다" "4·19혁명, 부마항쟁, 6월 항쟁의 주역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란 상찬이 많았다.

이날 문 대통령의 부산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퍼진 지난달 말 이후, 전염병과는 관련 없는 첫 외부 일정이었다. 올해 PK(부산·경남)를 찾은 건 두 번째로, 설 연휴 때 양산 자택을 방문한 지 11일 만이다. 공식 업무차 PK를 찾은 건 지난해 11월 말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이후 71일 만이다.

지난해 문 대통령이 공식·비공식 일정으로 PK를 찾은 건 모두 17번이었다. 설 명절이 있었지만 올해도 매월 한 번꼴로 PK를 찾고 있다. PK는 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4·15 총선의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선거까지는 69일 남았다. 자유한국당에선 "선거 임박한 시기에 꼭 해야 할 일인가"란 반발이 나왔다.

이날 신종 코로나 확진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나 모두 23명이 됐다. 이 때문에 "신종 코로나가 확산일로인데 이렇게 대규모 행사를 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인원은 300명 이하로 최소화했다. 방역시설이나 관련한 것도 조치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장 모든 입구에는 발열 감지기가 설치돼있고, 방역 요원도 배치했다. 주최 측은 참석 대상 중 2명이 발열 증상을 보여 출입을 제한한 뒤 진료를 받도록 안내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다. 문 대통령도 행사장에 도착할 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축사 직전에 마스크를 벗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는 비상 상황 속에 있지만, 경제활력을 지키고 키우는 일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광주·밀양·대구·구미·횡성·군산에 이어 7번째 '지역 상생형' 일자리인 부산형 일자리는 전기자동차 부품업체인 코렌스와 20여개 협력업체가 강서구 국제 산업물류도시에 입주해 2031년까지 모두 7600억원을 투자, 4300명의 일자리를 만드는 프로젝트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서울신문 2020년 2월 7일 금요일 021면 경제

3040은 빼고… 공공 일자리 2만개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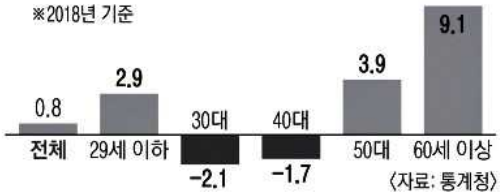
2018년 245만개… 전년보다 0.8% 증가
30·40대 줄고 50·60대 3만5000개 늘어

2018년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년보다 소폭 늘었지만 30~40대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공공부문 일자리는 245만 4000개로 전년보다 2만개(0.8%) 늘어나는 데 그쳤다. 증가폭은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일반정부 일자리는 209만 7000개로 전년 대비 1만 3000개(0.6%) 늘었고 공기업 일자리는 35만 4000개로 전년보다 7000개(2.1%)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 일자리가 각각 1만 4000개(2.1%), 1만 2000개(1.7%) 줄었다. 반면 50대와 60대 일자리는 각각 2만 2000개(3.9%), 1만 3000개(9.1%) 증가했다. 박진우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공공기관 정규직 확대로 2017년 말 계약이 종료된 비정규직 근로자가 2018년 하반기에 정규직으로 재취업됐는데 통계상 하반기 취업은 0.5(절반 취업)로 계산이 돼 30~40대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면서 "60대 이상 공공부문 취업자 증가는 노인 일자리사업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령별 공공부문 일자리 증감 현황 (단위: %)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朝鮮日報 2020년 2월 7일 금요일 B04면 경제종합

"공공일자리 81만개" 공약 文정부 2년간 6만개 늘어

2017년 증가치의 절반도 안돼

지난해 공공부문 일자리가 2만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공공부문 일자리는 총 245만1000개로 2017년(243만1000개) 대비 2만개(0.8%) 늘었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중앙·지방정부 공무원을 비롯해 공공 비영리단체 일자리, 공기업 일자리를 모두 포함한다. 2018년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친 일반정부 일자리는 209만7000개로 전년 대비 1만3000개(0.6%) 늘었고, 공기업 일자리는 35만4000개로 7000개(2.1%) 증가했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2017년 증가분(4만6000개)까지 포함해 문재인 정부 2년간 6만6000개 늘었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임기 중 81만개 늘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크게 못 미치는 숫자다. 이 공약을 지키려면 공공부문 일자리가 연평균 16만개씩은 늘어야 한다. 현 정부 들어 공무원 신규 채용과 노인 일자리를 크게 늘린 것을 감안하면 의외의 결과다.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가 생각보다 적은 것은 그만큼 불완전한 일자리가 많았기 때문이다. '취업자'와 달리 '일자리'는 근로자가 1년간 일해야 통계상 일자리 1개로 잡힌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만약 한 사람이 6개월간 근무했다면, 일자리는 0.5개로 계산되는 것이다.

애초에 81만개라는 숫자에 거품이 많이 끼어 있었던 탓도 있다.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81만개라는 숫자 중 순수하게 늘어나는 일자리는 17만개이고, 나머지 64만개는 비정규직이나 청소·경비 등 공기업이 민간에 위탁했던 것을 전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환된 공공부문 일자리가 2018년에는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게 통계청 설명이다. 박진우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정부 정책에 따라 각 기관이 2018년에 상반기 정규직 정원을 확보하고 채용 절차를 거쳐 하반기가 돼서야 사람을 대거 뽑았다"며 "이 때문에 실제 채용 인원은 많았지만 통계상으로는 일자리가 크게 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안중현 기자

이달의 예술

노동을 기억하는 방식들

미술가가 닫힌 세계를 벗어나 농민·노동자와 만나 이들의 미적 대리자이자 협동생산자이기를 자처했던 시절이 있었다. 1930년대 영국 탄광촌 광부화가들인 '애싱턴 그룹', 1950년대 중국의 농촌 '벽화운동', 1980년대 우리의 '시민미술학교'들이 그러했다. 그 이면에는 기꺼이 현장에 투신하여 노동자와 함께 호흡하며 이들을 조직하고 교육하고 이끌었던 미술가들이 있었다.

전태일기념관의 '시다의 꿈(3월 29일까지)'전에서 우리는 한층 몸을 낮춘 사진작가·소설가·미술가, 그리고 이들의 예술적 협업을 통해 복원된 여성 봉제노동자 4인의 삶을 만날 수 있다. 평화시장의 보조 미싱사(시다)였던 김경선·박경미·장경화·홍경애는 야학 '시정의 배움터'와 청계피복노조에서 함께 활동하며 30여년간을 미싱과 함께 살아온 이들이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녀들의 치열한 삶이 전시를 통해 한국 여성노동자의 보편사로 부활된 것이다.



전경숙, 김경선의 '미싱사의 꿈' 연작, 광목에 피그먼트프린트, 헝겊과 실(2019).

야학교사로 이들과 인연을 맺어 온 사진작가 전경숙은 사진첩 속 앳된 여공시절부터 중년이 된 최근까지의 모습을 찍어 흰 광목천에 인화했고, 베테랑 미싱사인 그녀들은 고급 박음질기술을 사용해 사진에 투영된 자신의 모습 위에 레이스와 라벨·자투리 헝겊을 이어 붙였다. 붉은 실을 박음질하여 미싱을 돌리는 자신의 손톱을 붉게 매니큐어링한 홍경애, 동네가 내려다보이는 봉제공장 창문을 헝겊 콜라주 커튼으로 장식한 김경선의 작업은 고된 봉제노동을 노동본연의 창조적이며, 놀이와도 같은 노동으로 환원시키는 행위이자 익명의 삶에 스스로 고유성을 불어넣는 행위다.

이들의 생애는 1980년대에 출생한 소설가 4인 이주란 『어른』·정세랑 『태풍의 이름을 잊은 것처럼』·조혜진 『인터뷰』·최정화 『쑤안의 블라우스』의 단편소설을 통해 복원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읽는' 소설을 '보여주기' 위한 전시 방식이다. 소설은 평화시장의 창문 없는 나무판자 다락방을 연상시키는 네 개의 방안에, 노조의 소식지인 양 거친 종이에 인쇄된 채 쌓여 있다. 방의 벽면에는 여성노동자 4인 삶을 상징적으로 시각화한 봉제패턴이 찍혀 있다. 이로써 소설가의 텍스트는 미싱사·시각디자이너·건축가와의 협업을 통해 물성을 획득하게 된다.

젊은 미술가 반재하의 작품 '셔츠와 셔츠'는 두 벌의 셔츠를 통해 글로벌의 층위 속에서 되풀이되는 봉제노동의 부당한 현실을 증언한다. 작가는 대형 브랜드의 1만9900원짜리 흰 셔츠를 구입한 후, 동일한 셔츠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 원단을 구매하고 패턴을 의뢰하며, 베트남 봉제공장에 제작을 의뢰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영수증, 계약서를 사진과 함께 전시함으로써 30여만 원의 실제작비가 1만9900원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역추적한다. 전시된 셔츠는 단순한 소비재가 아닌, 부당하게 압축된 노동의 집약물로 재인식된다.

작가들이 묘사하려던 것은 봉제노동자의 팍팍한 삶, 그 이면에 깃든 존중받아 마땅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이었다. 공동의 기억 속 사라져간 수많은 시다들의 삶을 기록하여 이름을 불러주고, 역사 속 합당한 자리를 마련해줘야 할 이유를 우리는 '시다의 꿈'전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이주현
명지대 미술사학과 교수

한겨레 hani.co.kr
2020년 2월 7일 금요일 023면 오피니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새로운 조합



세상 읽기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경제분과 의장

벤 버냉키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시절에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양적완화 정책을 과감하게 실시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지난 1월4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전미경제학회에서 '새로운 통화정책 수단'이라는 제목으로 특별 강연을 했다. 의장직에서 물러난 지 6년이나 흘렀지만 프린스턴대의 경제학 교수 출신답게 학구적인 면모를 유지하고 있었다.

버냉키가 한 그날 강연의 주요 내용은 양적완화와 아울러 중앙은행이 향후 금리 방향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선제적 안내(forward guidance)가 효과성이 입증된 정책수단으로 자리잡았다는 것이었지만, 통화정책의 한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특히 성장률이 낮고 인플레이션과 금리도 낮은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대응 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단기금리는 물론 장기금리를 인하할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의 경우에도 약간의 여력밖에는 남아 있지 않다. 현재 기준금리는 1.25%이고 장기국채 금리도 1% 중후반 수준이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처럼 국제통화 지위를 갖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자본의 국외 유출 가능성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를 제로까지 내리는 것은 모험에 가깝다. 설사 기준금리를 내릴 여지가 조금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러한 조처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 하락을 막지 못하면 그다음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요국의 거의 모든 중앙은행 당국자들은 약간의 인플레이션, 가령 2%를 넘지 않으면서 그에 근접한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별 부작용 없이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믿는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다. 기대가 실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기대를 적절히 높은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여기서 중앙은행의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 금리 인하는 유동성 확대에 의한 물가 상승을 유발하므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정책금리가 4%인데 이를 2%로 낮추면 실물경기와 인플레이션 기대를 자극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책금리가 1% 내외로 낮은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인하할 폭도 제한적인데다 자칫 금리 인하가 장기적 경기침체의 시그널로 읽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금리를 내려도 인플레이션 하락 추세를 막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 금리를 제로로 내리고 양적완화를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추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하더라도, 늘어난 유동성이 금융 부문에서만 돌아다니거나 이미 존재하는 실물자산인 부동산으로 쏠리는 허망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양적완화 정책이 성공한 것은 오바마 정부의 확장 재정과 트럼프 정부의 감세 정책이 총동원된 결과로 보아야 한다. 특히 양적완화에 힘입은 큰 폭의 주가 상승이 소비 증가로 이어진 것이 주효했으며, 국제통화를 찍어내는 국가로서 자본 유출을 우려할 이유가 없는데다 대규모 재정적자를 감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정부 부채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확장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할 수 있어서 당장 통화정책 대응이 급한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의 경우 금리의 실효하한이 제로가 아니라는 점, 정부 부채를 미국이나 일본처럼 마냥 늘려나갈 수는 없다는 점에서 새로운 정책 조합을 미리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전미경제학회의 강연에 담지는 않았지만 버냉키는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유동성의 일부를 재정지출이나 감세 재원으로 활용하여 실물경기를 직접 자극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연준 부의장을 지낸 바 있으며 매사추세츠공대(MIT) 재직 때 버냉키와 그레고리 맨큐 등 걸출한 제자를 다수 배출한 스탠리 피셔도 최근에는 중앙은행이 긴급재정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통화정책을 직접 다루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누구보다 지지해온 탁월한 경제학자들도 다음번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지 걱정하면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새로운 조합을 고민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정부와의 협력 모델을 만들지, 이제는 우리도 드러내놓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